

제37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폐회중)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0년3월25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
2.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 2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9
2.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29
1.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계속) 30
2.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계속) ... 33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웅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선이 20여 일 남은 이 시점에 하루 24시간 분초를 아껴 쓰실 만큼 바쁘신 위원님들께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 함께 모신 뜻은 지금 디지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총선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단과 근본적 방지대책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김성태 간사님.

○金成泰 위원 과방위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은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에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여성 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수많은 이가 관전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이 74명에 달하고 있고 그중 아동·청소년이 16명이나 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 사이버 환경이 일반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그 과정에 평판이 형성되고 정보가 노출되는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게 가해진 이 같은 폭력은 인격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자는 물론 영상을 시청한 26만 명 모두가 공범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이것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n번방은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파트너인 야당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준비했다면 내일 있는 현안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과 협의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처 준비도 미비한 것 같고 제반사항이 매끄럽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과기부가 코로나19 R&D 주무부처이므로 현안보고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한 현안보고는 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은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이 자리에 참석해 n번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재발 방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신고 핫라인 구축과 사이버성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폭 외에도 확실한 검거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사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안보고를 받고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손금주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금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금주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급하고 국민의 관심도 지극히 높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현안보고 일정을 잡고 함께 추진해 주신 노웅래 위원장님과 또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1.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

(10시11분)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사태의 현황과 대책에 관해 긴급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현안보고를 듣겠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먼저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적 공분을 넘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의안 정도를 하나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결의안 초안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충분히 이 안에서 토론되어지고 논의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외통위라든가 이런 곳에는 결의안들이 많이 있었던데 과방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 국민의 심각성에 비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때 국민이 정치권을 믿고 또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과방위의 의지를 함께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웅래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여당 위원님과 위원장님은 왜 마스크를 안 쓰십니까? 저는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도 국회의장부터 총리부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자가격리자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코로나 국면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조심하라 이런 것을 지침을 내리면서 왜 위원님들이 이런 상임위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저는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

겠습니까? 마스크 당장 착용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천인공노할 n번방에 대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소집한다고 하신 것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텔레그램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수차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관심 가지고 하시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잘하신 것인데 왜 이것을 야당과 협의 없이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안질의가 완전히 부실 현안질의가 됐습니다. 아무런 보고 자료도 나오지 않고 무슨 대책도 없고 우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부실하게 현안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얼렁뚱땅 이것을 했다는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n번방 관련한 우리 과방위의 질의를 계속해야 된다, 날마다 왜 못 하나, 저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간사분들께 n번방 사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현안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여기에 하고 대책을 국회가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러면서 일단 제가 당장 필요한 자료를 먼저 몇 개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심위에는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를 131회 개최했고 1만 4876건을 심의해 가지고 그중에 실제로 올린 것은 42건이더라고요. 이 모든 건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다루지를 않았는지 등등 일체의 관련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과 드루킹 사건 때에도 텔레그램 비밀방의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국감에서도 현 방통위위원장이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협의를 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방통위와 텔레그램 간에 무슨 협의한 것이 있는지 그 내역

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내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방지 협약 관련 4개 기관이 공조하겠다고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의 공조 내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필터링했다고 하는데 그 필터링 내역도 주시고, 또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이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했느냐 여부를 물으면서 방통위에 그 의견을 요구했더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부다페스트조약 관련 방통위의 내역 일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정부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현안질의가 이렇게 단 1회성으로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김종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과방위 차원에서 결의문을 제안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로 협의할지 여부를 간사님들이 회의 중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합의를 해 주시면 오늘 결의안을 추가로 상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위원장 노웅래 그리고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연혜 위원 마스크부터 좀 써 주세요.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타인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말 다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긴급회의와 관련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그래도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열었고요. 여야 간에 간사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야 협의를 거쳐서,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얘기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과방위가 회의를 자주 못 연 것은 위원

장이 나태하거나 직무유기를 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회의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부하고 이래서 회의가 안 열렸지 위원장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긴급현안회의를 하는 마당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생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20대 국회는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이 오늘은 긴급현안 상임위라는 것을 꼭 아시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규제·처벌에 대한 우리 과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해서는 마스크가 오늘 긴급현안질의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최연혜 위원 씨 주세요.

○위원장 노웅래 허윤정 위원님, 대책위 하시지 않아요? 한 말씀 하실래요?

○허윤정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노웅래 아니면 얘기 안 하고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것과 관계돼서.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저는 좀 짧게, 김종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결의안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숙의해서 결과를 냈으면 하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웅래 김종훈 위원님이 성착취 범죄 관련해서 우리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제안하셨고 박선숙 위원님이 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님들은 회의 도중에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처는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현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척결을 위한 긴급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요 내용입니다.

n번방은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공유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공유된 영상물은 단순한 음란물 수준이 아니라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들에게까지도 입에 담기 어려운 가학적 행위들을 강요해 만든 심각한 성착취물들이었습니다. 회원 수가 2만 명에 이르는 대화방도 있었고 입장료가 15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주범인 박사를 포함해 총 124명을 검거하였고 n번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n번방의 디지털 성범죄물이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재유통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페이지입니다.

그간 방통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들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을 신속 심의할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여 전자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방심위 내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였고, 심의 인력도 6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삭제와 차단이 필수적인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페이지입니다.

웹하드 내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불법 촬영물 DB를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페이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n번방의 불법·음란 정보가 웹하드를 통해 재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필터링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불법·음란 정보 상습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불법·음란 정보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웹하드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히 심의해 삭제할 수 있도록 방심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심위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고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약시간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조치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페이지입니다.

현재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이 각종 포털, 커뮤니티, SNS를 통해 재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이용해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과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음란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윤리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사이버폭력 중심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으로 확대하고 이용자가 피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SNS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물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방통위원장의 보고를 들어 보니깐요 지난 2017년 9월에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거의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땀질 처방에 불과한데 이렇게 제2의 n번방, 제3의 n번방을 예방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이 n번방 사건은 말이지요 공유된 영상물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발적인 영상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을 해 가지고 자기 의사에 반하게 해서 자기 고문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촬영하고 공유하게 한 반인륜 범죄예요. 파렴치한 반인권 범죄입니다. 이것 동시에 조직범죄예요.

오늘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스스로 악마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악마의 삶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이 악마였습니다, 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그리고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공범이예요. 심지어는 150만 원까지도 돈을 내고 보는 이

영상물이 단순 음란물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범죄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본 거예요. 26만 명이나 되는 이 가입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공범으로 규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텔레그램 n번방은 운영자나 가입자 전부 악마와 악마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범죄고, 다만 얼마나 더 나쁜 악마냐, 덜 나쁜 악마냐에 불과한 것이지 이 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이 범죄소굴을 소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n번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라고 내놓은 방통위원회나 방심위, 과기부의 대응을 보면 정부 합동 대책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내용이 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 n번방을 신범죄단체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가지고 n번방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 운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n번방류의 제2, 제3, 수없이 많은 비밀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망타진해 가지고 가입자들 스스로가 이런 불법 영상물,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요·협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동영상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스스로 여기에서 탈퇴를 하는 게 ICT 생태계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과기정통부랑 방통위, 방심위 계신데요.

방통위원장님, 지금 이 n번방 같은 가학적인 동영상, 협박·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이 이렇게 유포되고 공유되고 있는 데에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정책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이게 ICT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또 보호하는 정부 역할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면밀히 살펴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텔레그램이라는 높은 보안성 뒤

에 숨어 있는 얼굴 없는 범죄이고요. 인터넷 익명성과 비밀성의 순기능이 악용된 아주 악질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26만 전수조사 한다 그러지만 전수조사할 능력 있습니까? 기술도, 권한도 없잖아요. 무슨 수로 지금 26만 명을 전수조사합니까? 26만 개 휴대폰 다 뒤질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경찰의 수사 인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서버는 해외에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간……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노웅래 일단 지금 국회 생방송 중이니까 추가로 하실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까.

마무리 말씀 정리하세요.

○박대출 위원 그럴까요?

그래서 말이지요 n번방 방지 3법을 제가 제출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물론이고 가입자도 형법으로 공범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거고요. 그래서 그 운영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으려 그러합니다.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동영상, 성착취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촬영하면 그걸 유포해도 처벌을 못해요, 지금 법적으로. 본인이 촬영해 버리면 그냥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살펴봐야 법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협박죄만 적용이 되지 안 된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도, 협박 등에 의해서 촬영된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됩니다, 법적 규정을.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부분적으로는 현행 법규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대출 위원** 협박죄로 처벌한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것 규정하는 게 없어요, 지금 법에. 아주 법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n번방 같은 경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가 또 필요하신 분은 더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제 시간에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석영 차관님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게 워낙 충격이 크고 분노가 큼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 또 딸을 둔 부모님들, 모든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공감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 전원 처벌 그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해야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영상을 성착취물로 협박하고 또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보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포털에서 'n번방'을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의 경우는 정말로 놀랍게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검색 결과와 연관검색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구글 측에 어제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 2차 피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고요. 오늘 답변이 들어온 게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 삭제조

치를 3월 24일 자로 완료했다,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 삭제조치했다고 했고요. 그 결과 통지만 받았고 저희들도 다시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다고요. 구글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6년에 7300건 정도 심의를 했는데 2018년에 1만 7000건, 지난해 2만 6000건으로 늘었고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벌써 7500건을 넘었으니까 이게 심의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엄청나게. 그런데 여기서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아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사업자에 대해 어떤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게 잘 관철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과방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요구하는 것들을 해외 사업자들도 수용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선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보완책으로 현재 가능한 것은 해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기부 소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조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달라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광온 위원 그 법을 개정해서 해외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촬영물의 유통, 접속 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게 겨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이것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지금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형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위가 낮다는 데 대한 국민적인 공감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벌 규정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형벌 규정을 높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태료·과징금 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형벌 규정, 다각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가 피싱 사이트,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동영상 생성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두 번째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재유포하는 과정 이렇게 3단계로 나뉘 볼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또 과기부 차원에서 2017년 9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2018년 정부 측의 보고에서도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들을 계속 피력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텔레그램 n번방이 또 박사방이 이렇게 문제되는 시점에는, 2017

년부터 2018년 이렇게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해 왔지만 텔레그램의 보안성의 문제 그리고 서버의 위치 그리고 이 부분이……

○손금주 위원 자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쟁점,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통신망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문제가 정리되는 수준이기는 한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피싱 사이트나 그런 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손금주 위원 아니,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방통위의 대책 마련에 있어서 웹하드 차단, 그러니까 재유통 부분에 있어서의 조치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웹하드 또는 다크웹을 통한 불법 동영상 등에 대한 음란물의 유통 문제에 있어서는 2017년 이후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자율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효과를 못 거두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n번방과 같은 사태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재로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삭제하는 조치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서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해외서버……

○손금주 위원 우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조치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해외서버가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그 법적 효과가 미치게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간접적인 효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텔레그램 같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과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서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들이 이미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라는 것이고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전과약 그리고 방지작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조치에 들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손금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심위 차원에서 사전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자율심의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해결 성과가 있었습니까, 방심위원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자율규제, 자율심의는 사업자들이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업자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위하고 국제공조 점검단이라는 것에……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국제공조 점검단 이런 게 좋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소극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패널티를 묻겠다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손금주 위원님이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7년부터 지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아무야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저희들 대책 부분에 말씀하셨던 전 단계 부분, 개인정보 과약을 해서 불법물을 생성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방심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있습니다. 4일 만에 200만 청원이 있었지요. 이게 참혹한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온 국민들이 비대면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결국 국민이 끌고 가는 이 비대면 세상,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로 가듯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가는 세상에서 과연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 4년 의정활동 동안 제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부에게 힌트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직접 알려드렸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준비 안 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제가 다크웹을 통해서 성매매가 일어난다고 있다, 2016년·2017년. 쇼단에 의해서 불법촬영이 있었다,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2차 피해자를 죽이고 있다 또 유흥탐정, e집창촌을 통해서 디지털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있다, 급기야 1인 BJ를 통해서, 별풍선을 통해서 성매수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지적하고 힌트 드리고 사이트를 직접 찾고, 국회에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4년 동안 어떤 대응을 했나, 참담하거든요.

결국은 어린 여아들, 그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

를 이렇게까지 입고 나서야, 결국 여기까지 입고 와서야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부가 이게 범부처 대책이 아니고 돌부처 대책이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뒷짐만 지고 있고 또 뒷북치는 것도 정말 제가 봤을 때 잘 쳐 주면 좋은데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크웹 운영자 1년 6개월, n번방 전 운영자 3년 6개월 솜방망이 처벌, 이것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이런 형량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하겠고요. 정부가 지금 빨리 해야 될 일을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방통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 작년 9월부터 우리 신속심의제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송희경 위원 그것도 국회에서 난리쳐 가지고 상임위 신속상시제도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심의가 돼야 삭제가 되지요. 디지털에 유통되고 있는 그 음란물 영상, 피해자들의 음란물을 지우려면 거기서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심의를 하는데 그동안 10일, 30일 걸리던 것을 당기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주는 신속삭제제도가 있는 것 아시지요? 신속심의제도가 아닙니다. 신속삭제제도를 통해서 실제 1일 안에 삭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피해자를 도우는 거거든요.

지금 심의제도가 그렇게 신속심의와 삭제가 되고 있지 않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겨우 30명이 세 번 교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거나 경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것도 보고된 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음성 확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젯밤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 사이트를 돌아봤는데 이 텔레그램의 n번방을 뺏치는 사이트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스코드’라고 하는데 저게 온라인 게임메신저 방이에요. 들어가 보면 버젓하게 아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0대, 20대가 60% 가까이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06년생 영상이 있다, 2006년생 영상이 있다, 거기 답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곧 저녁 7시에 모이겠다, 많이와 달라, 이것 지금 텔레그램 n번방하고 뭐가 다

릅니까, 방통위원장님? 뭐가 다른니까? 이런 사이트가 지금 버젓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음성적인 확대가 더 이상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으로든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원회가 어떤 신속한 심의와 피해자 삭제제도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국민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젓하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대, 20대가 60% 넘게 들어가서 저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일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 일부 조치가 어떤 겁니까?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십시오, 일부 조치가 어떤 건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지난 3월 20일까지 17건 디스코드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n번방 때문에 약간 풍선효과처럼 나와 가지고 디스코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송희경 위원 디스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사이트를 알려 드렸으니까 경과보고를 나중에 해 달라고요. 대처를 하고 계신단니까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래서 지금 법안에 문제가 뭐냐면 스트리밍이에요. 이게 소지가 문제가 아니요, 지금은 전부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악의적 구매로 봐야 됩니다. 제가 낸 법안의 골자는 적극 소지자가 아니라요 적극 소지자도 형량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낮은데 적극 스트리밍하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런 처벌을 뽑아내려면 방통위와 방심위와 과기부가 얼마나 공조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웅래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이원욱 간사님.

○이원욱 위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요즘 바쁘시지요?

○박성중 위원 예.

○이원욱 위원 저희 상임위장에서는 선거운동복을 좀……

○박성중 위원 선거운동복 아닙니다. 우리 당복이지 선거운동복 아닙니다. 선거운동복은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전혀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노웅래 질의응답 하는 시간 아니니까……

○박성중 위원 잘못 질문하셨습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 자리에서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박성중 위원 아니요, 우리 의총이든 뭐든 이것 공식 옷입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위원장 노웅래 박성중 위원님, 질의응답 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중 위원 그 시간 아닙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 이런 데는 당의 운동복이라든가 당의 공식복이라든가 선거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입고 와 주시는 게 아무래도 국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 아닐까 싶어 가지고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현장에서 뛰어오다 보니까 선거운동복 벗고 당복만 입고 나왔습니다. 품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송희경 위원님이 지난 우리 국감 때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누차 강조를 많이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방통위, 방심위는 송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우선 과방위 위원으로서 또 저는 여가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여가워 위원으로서 이런 디지털 성착취 방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인격이 살인당

하는 이런 사태가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인격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처벌은 사실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방위에서는 SNS가 이 범죄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2차, 3차 피해가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정부에서 보고해 주신 것으로는 대책이 너무, 아직은 정말 초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번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2소위에 올라와 있는 여러 법안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여러 법안들을 가지고 선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n번방 문제의 특이점은 하나 같이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글로벌 SNS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해외 SNS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는 범죄자들의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n번방 청원 사건이 2월 10일인가요, 11일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1호 청원이 됐습니다. 그때도 언론에서 많이 댔는데 그 이후에도 저게 양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대책을 내려주신 것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협력을 구하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나왔지만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고요. 그게 사실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조를 요구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동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부당국의 협조가 미비할 경우에는 국내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와 여러 곳에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텔레그램 자체의 차단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신용현 위원** 그래서 그 주범뿐 아니라 아까도 얘기 나왔던데 26만 명가량의 공범까지도 잡아내려면 사실은 지금은 이메일로 정보 요청을 해도 삭제는 해 주지만 정보에 대해서 제공은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표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44조가 이게 과기부 소관인가요? 방통위 소관인지 과기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성년자로 확대를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닌 어떤 강제조항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광온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고 왔더니 네이버나 국내 포털인 경우에는 n번방 관련 문자나 이미지나 동영상 연관검색어가 전혀 안 뜹니다. 그런데 구글은 지금 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국내 포털 경우에는 방심위가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KISO에서 자율규제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 팔러시(one policy)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

시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어제 협조 요청을 구글에 했고요. 그쪽에서 삭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과연 삭제 조치를 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구글에 대해서는 항상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는 협조하겠다고 답을 하고 그다음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참 어떻게 디지털 성착취가 횡행하는 이런 사회가 됐는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엄벌을 하든 어떠한 법령을 개정을 하든 디지털 성착취, 사실 이것 인간성 말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형벌을 강화하고 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하든 간에 저는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활동을 보면 2017년 9월 달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법도 또 개정을 했습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윤상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n번방 같은 정말 성착취, 그러한 범죄행위가 횡행하느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ICT 서비스가 발전을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윤상직 위원** 그것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착취에 대해서 정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 뉴스만 관심을 쏟았지 이러한, 이런 민생이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거지요. 일단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그럴 생각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의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책 가지고는 철저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외 사업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국내법을 개정해 본들 관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한 부분들, 회원들 고객들에 대한 신상정보 문제는 대부분 다 국내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 업체의 경우에는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자꾸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해외 사업자의 집행력을 높이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 9월 달에 종합대책을 발표하실 때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경찰청이 왜 들어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이게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들어온……

○**윤상직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한 나라의 관할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폴이라는 국제사법 공조를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그러한 성 관련 동영상은 국제적으로 다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국내에서 해결하겠다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적어도 인터폴을 통하든 각국과 공조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미국에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지요. 일본에도 있고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국제 공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은 이제야 n번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국제 공조를, 거기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하고 신속심의를 하든 공염불이다 이거지요.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고 국제 공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방통위 차원에서도 하시라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웅래** 지금 국제적인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폴이라든가 부다페스트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의 규제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동영상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국제적인 큰 범죄예요. 그것은 미국의 방송통신규제위원회에서도 말 안 해도 단속한다고요. 서로 간에 협조하고 국제 공조하면 되는 일입니다.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책임 회피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와 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누누이 제기가 됐습시다라는 현재 사전적으로 무슨 그 사업 내, 플랫폼 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수사하듯이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범죄행위로 포착이 되어서 추적, 방법…… 제2차적으로 유통되거나 행위가 노출됐을 때 그리고 또 행위자가 일부 검거가 되어서 그 진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증거들이 수집됐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사 이 정도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로스 보더의 특성상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있는지, 그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 웹하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권이 있습니까? 신고 안 하면 못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적인 정보 유통에 의해서 동영상 유통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러는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n번방과 유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다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조치를 취하겠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정확한 현상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

고 유통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정도를 높여서 완화를 하는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들은 존재를 합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서버가 한국에 있는 카톡은 잘 모르겠습시다라는 독일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또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설사 그 나라의 어떤 성범죄가 명백히 처벌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방적으로 그 서버를 전부 다 뒤져 가지고 압수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니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두 처벌할 수 있다라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대응 방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해외에 서버가 있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 n번방에서 처벌되고 추적된 내용들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2차적 유통을 사후 추적해서.

그런 정도를 분명히 하셔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보겠다, n번방과 같은 유사한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위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고 국제 공조하겠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것

도 없어질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2차적 유통 문제에 대해서……

○**이종걸 위원** 지난번 국회에서 구글에 대해서 이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라도 받아 봐라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신고받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구글은 신고는 되어 있지만 텔레그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구글은 신고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구글 코리아는 신고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구글코리아가 신고를 했지 구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본사는 안 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부분적으로 협조가 가능한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걸 위원** 구글도 구글코리아가 하고 있는 것과 해외에서 그냥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신고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텔레그램은 아예 접근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실상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VOIP 서비스를 하는 SNS 사업자들에 대한 포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카톡이 20%고 텔레그램이 5%고 라인이 5%고 또 무슨 스카이프가 몇 %고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거의 깜깜이 눈에서 이렇게 되쳐보는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추적해서 보고 말고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전부 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

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를 나눠서 그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국제 공조든 인터폴에 의뢰하든 해서 그 부분에 접속을 해서 불법 동영상을 생산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모두 찾아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위하효과가 생겨서 이후에 그런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됐거나 지금 각종 기술적 조치들을 요구하는, 의무를 부과하라는 이런 조항들은 있지만 이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의 수준들을 높여 나가는 입법활동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이원욱입니다.

보통 저희가 음란물, 음란물 이렇게 부르는데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원욱 위원**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음란물과는 좀 비교해서 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구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음란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원욱 위원** 그것은 굉장한 착취이고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어를 음란물이라고 하지 말고 성착취물,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뿐이 아니고 처벌을 위해서라도 음란물의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신 불법 성착취물하고는 구별을 해서 개념 규정을 해야 처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것은 방통위에서 입법할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법사위 쪽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법체계상 연관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만 처벌규정은 저희들의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내용에다가는 그런 구분을 하는 내용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줌으로 해서 방심위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심위도 성찰취월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심의·조사요건들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 관련 법도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원욱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작년 2019년도 2월부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는 등등 하면서 이것이 디시인사이드라든가 일간베스트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영상물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른바 성찰취물이. 그런데 그때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응했다라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지 않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불꽃, 대학생 2명이 불꽃 추적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잠입 르포를 하면서 이것이 만천하에, 한겨레신문에 작년 11월에 공개가 되면서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국가는 뭐 했냐는 거예요. 대학생 2명은 할 수 있었는데 방심위는 과연 그 기간 동안 뭐 했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이 강화했던 부분들은 웹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물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삭제조치하고 차단조치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는데요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대학생 2명은 할 수 있었는데 국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미 그것은 작년 2월부터 공론화된 문제였습니다. 디시라든가 일간베스트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생 2명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면 서버를 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원욱 위원 텔레그램은 안 남아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통신제한조치들을 해야,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일대일 메신저가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피려면 통신제한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원욱 위원 아니, 내 핸드폰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압수해서 가져가면……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이원욱 위원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서버는 어차피 못 뒀다고 보고 아까 이종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 서버를 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그 범죄행위를 일으킨 자나 유통시킨 자의 핸드폰에는 증거가 남아 있을 거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남아 있겠지요. 남아 있고 일부는 자동 삭제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원욱 위원 핸드폰에서요? 핸드폰은 버리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텔레그램 서비스에……

○이원욱 위원 아니, 텔레그램 서버에 있는 서비스는 사라지는데 텔레그램에서 했던, 카카오톡에서 했던 내용은 핸드폰을 개통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없애는 순간까지는 다 고스란히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텔레그램 부분은……

○이원욱 위원 아니, 다 남아 있어요, 문자도 다 남아 있고. 문자를 예로 해 가지고 지우면 우리는 문자를 못 본다고 하지만 그 문자를 보내고 받았다는 흔적은 자기 핸드폰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확보를 하면 거기서 연관성을 찾아서 나가는 수사는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만이 아니고 아까 불법 성착취물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는…… 불법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방심위한테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실제로 사전에 신속하게, 그러니까 수사기관까지 넘어가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그것이 차단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렇게 되려면 방통위나 방심위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원욱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특사경이라든가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에서도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조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작년 9월 초에 피해자 신고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이어서 심의 시정요구한 바가 있었고, n번방에 대해서. 박사방은 올해 1월 16일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어서 24시간 내에 심의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역은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에 중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텔레그램 관련 내용들을 최근까지 한 200여 건 정도 저희들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인지하는 순간에는 즉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아서 조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지금 방심위원장 말씀하신 게 인지하는 순간 조치를 한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특히 아까 송희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과방위원님들 덕분에, 특히 방통위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구축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전만 해도 사흘 정도 걸리던 일을 지금은 24시간 이내에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디지털로 기술은 진화되어 가는데 심의는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염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신데,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공조 차원에 있어서도 그냥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 영역들을 어떻게 협조를 구하느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텀블러가 매일 매주 몇만 건씩 터져 나왔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방통위 협조도 구하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완전히 사그라졌지요. 거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몇만 건 매일 나오던 것들이.

그래서 이런 국제 공조를, 이제 여기서 매일 보내고 연락하는 차원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국제기구가 있듯이 그쪽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방심위와 방통위도 해외주재원 같은 것을 뒤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초기단계에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여기 앉아서 전화하고 메일 보내는 수준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신속히 인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착취 음란물에 대해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거기까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위원장 노웅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음란물이든 SNS나 대화방, 앱 이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겠다 해 가지고 한다면 신속히 인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처벌할 수 있을 거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저희 홈페이지에

는 그런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이……

○위원장 노웅래 아니, 그러니까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신속히 인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신고포상금 제도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검토해 보세요. 자꾸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아야지. 기술적으로는 불법 음란물 배포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위원장 노웅래 제안합니다,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먼저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는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디지털 범죄에서 세 가지 공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분이 디지털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분노라고 여기고요. 특히 여성·아동에 대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성폭행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성폭력을 26만 명이라는 남성들이 공조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폭력에 26만 명이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봤으면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점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피해자는 여성이고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여자는 또 문제다, 남성들의 일탈 정도이지 않느냐라는 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것 국민청원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김종훈 위원 국민청원 된 사실입니다. 국민청

원을 무시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오고 갔느냐? 법사위 회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그것이 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참으로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민낯을 보여준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이미 밝혀진 것 외에 다른 n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n번방 피의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범죄자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방통위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실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김종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더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에 맡기거나 사업자의 양심이, 사업자가 그런 조치를 하게 해서 안 변한다는 것이지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정부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제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n번방 서비스,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아까 심의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인지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겨레신문에도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

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의 범위를 키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실 텐데 어떻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재 지금 문제된 내용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처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벌 규정이나 이런 데 보니까 과태료를 20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상향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김종훈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에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렇고요. 아까 과태료 말씀드렸던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금 과태료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올리고 과징금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관대해서는, 이 범죄를 이렇게 무마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어떤 책임은 저는 같이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만든 10만 명의 청원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는 문제는 우리 국회 모두가 어쨌든 간에 책임

을 져야 될 공동의 과제이다 이것이 정부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정 모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 아동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충격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 해 나갈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 그동안 매년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가 됐던 문제이고요. 실제로 2017년에 종합대책도 나왔고 해마다 보완조치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기부장관이나 방통위원장 또 방심위원장이 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n번방 사태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고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안질의 보고를 어제든 만들지 못하고 오늘 가져오겠다 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들어있을까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날짜 자체도 예전에 있던 것 다 그냥, 옛날에 했던 날짜들이 다 나와 있고 새로 나온 것은 대통령의 분노, 대통령이 이것 전부 다 해라 또 신상정보 그것 조국 씨 때문에 신상공개 포토라인 없었던 것 이 사람만큼은 세워라, 이것만이 최신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방통위와 방심위 또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과기부차관, 여기 좀 쳐다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최연혜 위원 장관이 왜 출석을 안 했느냐, 저는 이 문제도 간사분들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장관이 나와서, 지금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는데……

○박선숙 위원 상중, 모친상.

○최연혜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다음번 현안질의 때는 반드시

장관이 참여해서, 참석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차관도 지금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내가 보면 꼼꼼히 듣지를 않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뭐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답변할 때 보면, 심지어 여당의 위원님께서 중진 위원께서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접근이 사실상 힘들다. 왜 대책이 있는 것처럼 대답하느냐? 지금 나온 정도만 해도 매우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슬며시 거기에 동조했어요. ‘사실상 어렵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히 얘기해라’ 이러면서 두 분이 오고 갔는데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연혜 위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밖에 대책이 없다 그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예상 못 했던 새로운 형태들의 범죄 행위들이 생기면……

○**최연혜 위원** 예상 못 했던 새로운 형태라는 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또 처벌을 하고 그런 겁니다.

○**최연혜 위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원욱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대학생 2명이 찾아낸 것 사실 지난 11월, 작년 11월 27일 한겨레신문에 이미 상세하게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나왔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이런 수준이다? 저는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 방관이다 방조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안질의는 아무 내용도 없고

정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현안질의가 되어 버렸고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은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단 하나라도 근원적인, 사전적인 대책에 관련된 방안을 고민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관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하겠다고 줄기차게 약속을 했었어요. 화이트 해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우든지 국제 공조를 하든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소한 부다페스트조약 여기 가입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 아니고요.

○**최연혜 위원**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거기에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이미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최연혜 위원** 그런데 지난번 10월에 국감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법무부에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 제시한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웅래**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현안보고는 오늘 내용이 부실하거나 좀 미진하면 언제든지 또 긴급현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위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우리 아이들의 성착취 음란물이 이렇게 나도는 상황까지 왔다 그런다면 아무리 선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연혜 위원님도 정부 과기부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과기부도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R&D 예산 갖고 뭐합니까? 성착취 음란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개발할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R&D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아니,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일부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위원장 노웅래 그래서 과기부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일부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최신 유행어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일부 하고 있다는데 그 일부가 뭔지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위원장 노웅래 허윤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강상현 방심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n번방 박사 조주빈에 대한 청원이 200만을 넘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n번방 외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고담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초의 n번방 개설자 갓갓은 경찰이 현재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원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방심위의 역할 어디까지라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저희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시정요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사업자들에게 알려서 그런 것들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윤정 위원 방심위가 사실은 이제껏 하던 업무의 책임을 방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쓰신 것처럼 나름의 업무 범주 안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러한 것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처럼 매년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사이트라 처벌이 제한적이

고 사후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반복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이렇게 반복된 답변과 문의가 계속되는 구조에서 국민들이 이 선에서 양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사후약방문과 같은 답변이 오가는 사태에 대해서 실제로는 방심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어떤 제도적인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제실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저희 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이자 한계는 사후 심의라는 데 있습니다. 사전에 그에 대한 예방까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 업무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거나 모니터링 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그것이 한계이자 해야 될 업무의 영역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과방위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해주셔서 가지고 적어도 최근 1~2년 사이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하나 처리하는데, 현안 처리하는 데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것을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3일로 당겼다가 작년에 드디어 조직 강화를 통해 가지고 24시간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그것 들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 한 7~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안건 수도 최근 2~3년 사이에 1.5 내지 2배씩 증가하면서 가급적 많은 범위를 소화시키려는데 여전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아주 전통적인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추이는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들도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AI 기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들 손으로 할 수 없는 범위까지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심의위원회의 특단의 조치는 디지털식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 인지 안 되는 범위까지도 기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특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국제 공조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특단의 새로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관건은 해외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에 의한 협조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n번방과 같은 것을 해외 사업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위원 저도 추가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또 음란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이 처벌을 상당히 강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음란물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아동·청소년물은 그렇다고 봅니다.

○박성중 위원 디지털 성범죄, 세계 각국이 다양화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국이 IT 세계 선진국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5G 세계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한국 디지털 성범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땅으로 기고 있다, 하늘을 나는데 땅으로 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언제 시작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다는 말씀은……

○박성중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됐네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파악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요, 정확하게는요. 대체적으로 언제 문제

가 됐다는……

○박성중 위원 참 대답하시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이시고 변호사이니까, 좀 전문가적인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답변은 잘하는데, 실제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두리몽실 넘어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텔레그램 n번방 2018년 11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언제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성중 위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2017년도 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제 임기 중이 아니니까요.

○박성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장이 낸 보고서에 다 있어요, 정말. 2017년 9월 달에 나왔어요. 이 정부가 나오고 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n번방은 그 1년 후인 2018년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1년 전에 종합대책 한다고 했지만 텔레그램 n번방이 그 1년 이후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피해자 신고는 언제 나왔어요,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신고?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신고가……

○박성중 위원 대략 언제 나왔냐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2019년도경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하도 답답해서 나 참. 2019년 9월입니다. 1년 뒤에 나옵니다. 1년 동안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봉급 받아 먹고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부 대책이라고 나왔지만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성중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성중 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대부분 인터넷이고 뭐고 이미 추정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추정치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나라?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두바이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독일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지금 내놓은 이 통제 방법들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현재도 메일을 통해서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박성중 위원 말 돌리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말 돌린 적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전문가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그 해당되는 플랫폼 예산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과징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그 회사에는 이게 껌 값입니다. 10만, 20만이 올라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포상제도라든지, 파파라치 그런 포상제도라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또 해외 수사기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협조라든지 기타 다양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 한마디도 없어요.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1년 전의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뭐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한마디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소지만 해도 처벌받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우리도 소지하면 처벌받습니다.

○박성중 위원 처벌받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성중 위원 우리는 소지 아직 처벌 안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부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중 위원 말 돌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말씀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청자 구매자,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작자는 신상공개가 원칙이고, 이번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했지만 신상공개가 원칙이고 구매자도 필요한 경우, 진짜 심각한 사건인 경우에는 구매자도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 하늘을 뚫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땅을 기어도 땅 밑으로 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손석희,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권 인사들이네, 김웅 기자는 모르겠지만. 혹시 관련되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입법 미비나 신속대응 부재에 관해서 지적하셨고

또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물의 즉시삭제 조항을 이미 도입했고 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도입하는 법 개정도 진행을 해서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성범죄 예산도 국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했던 면이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기정통부차관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역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입니다. 제가 발의했고 2018년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 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점에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좀 더 행정 적극주의의 입장으로 이 법의 역외 규정 조항을 어떻게 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답을 가져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 과정에서 행안위가 삭제한 것을 저희 과방위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다시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행 조항이 없는, 처벌 조항이 없는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부적절 정보의 제공이니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세분화할 것인가에 관해 정부의 의견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선숙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적 미비점의 보완은 국회가 남은 회기 안에 여야 없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행정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저희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더 이상 국회에 와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국회가 또 국민들이 질문할 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25만 명 전원을 처

벌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정부에 해 놓은 상태인데 경찰청에서는 실제로 25만 명, 그중에 주요 사용자들까지도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경찰청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데, 정부 안에서도 방통위는 그런 경찰청과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직 구체적으로 처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협조할 것들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아니, 협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에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저는 이 문제도 코로나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기면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방통위와 방통심위, 과기정통부가 훨씬 적극성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는 디스코드, 텔레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디스코드로 넘어간다는데, 그쪽까지도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협조를 요청하셔야 하고 저희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역외 규정을 해외사업자들에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찾아서 엄중하게 경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박선숙 위원 텀블러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국제 공조를 받아내거나 해외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도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앞에 방통위원장 답변하시면서 구글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확인 하기도 다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구글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KISO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사업자들은 이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외 규정을 적용하여 KISO에 참여

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요구를 해 왔지요, 저희들도 계속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숙 위원** 다시 한번, 그냥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역외 규정을 적용해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내법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하고 또 견인해 내고 이런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마이크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방통심의위원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성매매에 사용된 채팅앱을 시정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디지털 성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채팅앱들이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작년에 320개의 애플리케이션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간사님.

○**金成泰 위원** 오늘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방통위, 방심위, 과방위 공히 지금 준비하고 답변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청원이 엄청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표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그간의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가 현안질의로 열렸고 그동안에 과방위에서 국감 등 여기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 엄청난 지적을 해 왔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미온적인 태도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체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는지에 대한 지금 정부 부처의 자세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심위원장, 여기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金成泰 위원**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어, 지금 연관검색어 삭제했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金成泰 위원** 자동완성도 그러면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金成泰 위원** 자동검색은 오늘 방금 제가 검색을 해도 그대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고 그 피해자로 짐작되는 분의 성함이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인식되는데도 그 사후조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피해수법은,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수법은 매우 앞서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일으키면서 또 선량한 국민들도 여기에 범죄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들을 미리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건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범부처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촉구하고 오늘의 현안보고로 땀뻑으로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종합대책을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수립해서 할 건지 또 여기에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의원실과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려고요.

○**金成泰 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아이디어……

○**金成泰 위원**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용 보고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요.

○**金成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답변하던 중입니다, 지금요.

○**金成泰 위원** 아니, 그렇게 하겠느냐고 질문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요.

○**金成泰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셔야지.

과방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R&D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成泰 위원**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유통 특히 해외사업 책임자에 관한 여러 가지, 역외 조항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역외 조항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반 관련 법안 조항이 필요하면 우리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저는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n번방 방지 입법을 포함해서, 제가 제2법안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것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

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질의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박대출 위원** 잠깐, 저 조금만 정리할게요.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2분? 3분?

○**송희경 위원** 3분 하시지요.

○**위원장 노웅래** 3분 할까요?

○**박대출 위원** 3분씩 하지요.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3분씩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아까 주질의 때, 잠깐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2개만 일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방심위원장님, n번방 가입자 26만 명 전수조사 가능합니까, 현재? 솔직히 얘기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26만 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가능한 부분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박대출 위원** 전수조사라는 게 지금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연관 고리만 찾아내면 강제수사를 통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26만 명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흔적이 남아 있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대출 위원** 수사에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이 기법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ICT 기법으로.

방심위원장님,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26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2만~3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거기에 중복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박대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확히 모르면서 대통령이 26만 명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

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불법 음란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단순음란물과 고문·협박에 의한 성착취물 이게 지금 n번방에, 대화방에 있는 게 단순음란물이 아니고 전부 협박에 의한 성착취물입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대략 어떤 유형들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박대출 위원 n번방에 있는 게 100% 다 그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박대출 위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성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물론이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한 두세 줄만 하면 되니까.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서 처벌키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판매·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서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글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좀 심각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방심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이게 지금 과방위 소관 법안은 아닙니다. 과방위 소관 법안은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의 망법이나 여기에다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라든지 또 기타 몇 가지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관 남의 소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부처가 각각 의견을 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잘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웅래 지금 질의 중이지만 성착취 범죄 근절에 대한 결의안을 김종훈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요. 박선숙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이걸 준비 중이어서 긴한 일 때문에 나가셔야 될 분이 일부 있어서 질의는 잠시 이따 하고 먼저 결의안부터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복사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한 분 더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노웅래 그래요?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희경 위원 방심위원장님, 24시간 심의제도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송희경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열악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신속심의제도지만 신속심의 이후에 삭제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위해서는 제도가 아니라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해 주시고 경과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디스코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송희경 위원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장님, 제가 계속 부다페스트 공조를 강조했던 것은 지금 범죄가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되는 게 디지털 성범죄, 마약 거래, 사이버 해킹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송희경 위원 그런데 제가 임기 아니실 때도, 그전의 방송통신위원장님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법무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공조라는 것은 인터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다페스트 공조 조약을 해 놓으면 국가 간에 공조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밑에 있는 서버업체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그 개입이 무슨 의미냐 하면 부처간에 공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위가 올해 1월에 텔레그램 대화방 198개를 자율 조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송희경 위원 그런데 그 계정을 확보해서 가지고 수사 의뢰도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송희경 위원 자, 계정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가부랑 과기부랑 경찰청이 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 통합관리 DB에 그냥 소지물 다운로드 받은 것만 있지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 즉 돈 내고 회원 가입해서 시청을 하는 것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유료가입자에 대한 것은 계정 공유를 해서 계정 확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부다페스트 조약이나 여러 가지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통위가 방심위가 과기부나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무부처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건 상시

화돼야 되는 범죄예요. 지금 경찰청이 상시 경찰을 하듯이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 위상이 그렇게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3, 4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적극 개입하시고요.

지금 과기부차관님 나오셨는데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저번에 불법 촬영물 걸러 내는 기술 개발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송희경 위원 그것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 기술도 지금은 해외 SNS 사이트나 해외 BJ 사이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트리밍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 다운로드 요즘 안 받습니다, 소지하고 있으면 다 형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이 스트리밍, 내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있어서 돈을 내고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라 이겁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는. 그리고 그걸 하게 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매기라는 거예요. 왜? 세대가 변했거든. 세대가 변했으니까 처벌 방식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스트리밍 영상이나 메신저 유포에 대해서도 그 AI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그걸 방통위랑 함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 기술에 관해서는 그냥 죽이지 마시고 국민 세금으로 연구과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송희경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말씀하십시오.

○송희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 공유,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력인 거지요. 부처 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는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무 부처들이 따로 있다, 부처 간의 협력이 아니라 내가 실제 행한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엄중하고 참담한 결과가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아까 디스코드 말씀드렸지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본다고 한들 심의하고 삭제한들 정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바르지 않으면 액션이 안 되는 겁니다. 부처간에 협력을 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상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송희경 위원 그리고 잠깐 건의를,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송희경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방위가 지금 이렇게라도 n번방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은 물론 굉장히 급하게 열려서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 때도 드라이브 쓰루를 우리가 쓸 줄은 몰랐거든요.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배달원의 라이딩 서비스 업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음식도 배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비대면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방송통신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무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과방위가 앞장선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방심위원장님이나 방통위원장님이나 과기부차관님께 여러 가지 자료나 경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보고받도록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간사간에 합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미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더라도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경과보고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웅래 예,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좀 미진했다고 그런다면 또 한 번 더 회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일단 한번 간사님들이 의견 모아 주시면 신속히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시16분)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지금 질의 중이지만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안건을 추가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에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노웅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위원장)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결의안 유인물이 배포됐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간사님.

○이원욱 위원 지금 결의문을 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몇몇 단어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5번 항목에, 뭐 내용의 구체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5번 항목이 지금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형법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넣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뒤에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형법'과 특례법 뒤에 '등 관련법'을 추가해 주실 것을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노웅래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이원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등'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아청법. 그래서 아청법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成泰 위원 아청법도 들어가야지.

○박대출 위원 예, 좋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게 들어가야 되겠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손금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형법, 아청법 동의합니다, 저도요.

○金成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노웅래 김성태 간사님.

○金成泰 위원 3번 항에 죽 우리 위원회가 해 가지고 지적하고 ‘정부가 보다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제적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선제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엄중한 대책’.

○위원장 노웅래 지금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손금주 위원님이 아청법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이 선제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리시면, 송희경 위원님……

○박선숙 위원 위원장께 조문 정리를 위임하면 되니까 의결하시지요.

○이원욱 위원 문구 조정은 위임하고……

○박대출 위원 그것 다 반영한다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노웅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주신 것은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의결정족수 됩니까?

○위원장 노웅래 안 돼요.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박선숙 위원 송희경 위원 다시 오라고 해요.

○이원욱 위원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박선숙 위원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나요?

○金成泰 위원 예.

○박선숙 위원 그러면 송희경 위원님 빨리 찾아 오세요.

이 누가 있으시지요, 추가질의?

손금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손금주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방통위나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검찰, 경찰이 해야 될 영역까지 되게 주문을 많이 해서 가지고 약간 혼돈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 또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이게 청소년들이 말이에요 사건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피싱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정보가 노출되면서 이런 비극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손금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막는 사전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 위원 아마 위원장님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고.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 방통위의 규제 권한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약간 약화된 측면이 있긴 한데 피싱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지금 논의되는 해법 중에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형사처벌화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리고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조가 실질적으로는 방통위의 소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들을 방통위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서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1.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계속)

(12시18분)

○위원장 노웅래 일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손금주 위원** 헌법재판소 2017헌마 결정이 있더라고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소극적 의무, 온라인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의무 규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례가 있습니다, 결정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규정하고, 이 규정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체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해서 유사한 규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해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은 자꾸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론에 대해서 과기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통위에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자꾸 섞이면 안 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노웅래** 다음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이게 3월 24일 날짜의 뉴스입니다. 지금 n번방 사건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는 요구가 저렇게 많고요. 오른쪽에 보면 급상승 검색창에 저렇게 상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그 영상자료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지금 잡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삭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접속 차단은 할 수 있지만 삭제는 접속 차단 거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 차단은 해 놓으면 계속 우회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지 빨리 삭제를 시키는 것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이따 조금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과기정통부차관님께도 여쭙보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과기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AI를 이용한 모니터링 자동화하는 것을 지금 웹하드에는 적용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아까 송희경 위원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2018년, 2019년에 그 기술을 다 개발해서 일종의 민간사업자 판도라TV 등을 통해서 시범운행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하드 쪽에 적용을 하고 있는 데요.

○**신용현 위원** 저게 ETRI에서 벌써 그 연구 결과가 2019년 12월에 나왔고 사실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도 AI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R&D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AI 기술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적용해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삭제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위원장님, 삭제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신용현 위원**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오늘 사실은 시원한 답을 어떤 실효성 있는 답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음번에는 효과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법안이나 어떤 제도가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삭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자의 적극적

인 자율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복제돼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삭제 요청을 해서 하나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것들이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삭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해 나가고 있고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답을 사실은 3년, 4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 죽고 나서 유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업자를 사고 그렇게 해서 삭제를 시켜도 그것을 삭제를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주셔야지 계속 그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선의에 기대를 한다, 협조를 요청한다 이 얘기는 벌써 너무 오래 된 얘기이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 다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찾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정말 파파라치처럼 보상을 해 주고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신용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11월에 방통위와 방통심위, 여가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상시 협력,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AI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죽 됐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방지 기술개발 활용추진 상황, 활용하기로 여가부하고 업무 협약도 지금 과기부가 맺어왔는데 아까 하신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작년 11월에 맺은 업무협약,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 맺은 업무협약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기부와 여가부가 맺은 업무협약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 하는데 과기부와 여가부의 기술개발 활용에 대한 것은 진행 상황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금년 2월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박선숙 위원** 예, 맞아요. 그래도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AI 모니터링을 당장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방통위·방심위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경찰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가부·방통위·방심위·경찰청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들어와야 하고 검찰도 포함되어야 하고 사실은 저는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총리가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추적조사의 공동 대응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방통위와 방심위가 정부와 같이 공유되고 해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청장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늘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의 답변 수위가 조금 낮아요. 경찰청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방통위나 방심위는 그게 가능한지를 좀 미심쩍어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니, 전혀 범주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는……

○**박선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디스코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답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텔레그램의’ 이 정도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텔레그램은 그렇고요. 디스코드하고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숙 위원**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선숙 위원** 그러면 그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가지고 좀 알려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박선숙 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채팅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게 매개체가 되고 있으니까 CPU 문제도 좀 점검하셔서 될 거고 웹하드, 아프리카TV도 점검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강상현 예.

2.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위원회안)(계속)

(12시35분)

○위원장 노웅래 질의 중이지만 결의안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간사님, 김성태 간사님, 손금주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고요.

의사일정 제2항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수정하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출 위원 수정의견 저도 냈는데요.

○위원장 노웅래 박대출 위원님도 수정안을 같이 함께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김중훈 위원님이 마지막인가요?

김중훈 위원님까지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훈 위원 짧게 의견만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강력한 처벌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실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뜨겁게 달구어지다가 또 지나고 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강력한 규정, 규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산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수요가 있는데 그것은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무를 분명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무를 주지 않는 한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특히 또 외국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정부가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너무 매달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글이나 이런 큰 외국 사업자들에 대해 눈치를 보거나 강력한 제재를 못 하거나 이런 것 아니냐라는, 사실은 혐의나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강력하게 접근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n번방 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마치기 전에 과기부 장 차관,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8년에 성착취 음란물에 대한 사전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ETRI가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됐다고 하면 사전차단이 됐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개발이 제대로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

리고 지금이라도 개발이 되도록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장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이상으로 n번방 현황과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허윤정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긴급현안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련 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金成泰	김종훈	노웅래	박광온
박대출	박선숙	박성중	손금주
송희경	신용현	윤상직	이원욱
이종걸	최연혜	허윤정	

○청가 위원(1인)

김경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한성구
입법심의관	정홍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장석영
기획조정실장	전성배
연구개발정책실장	용홍택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
네트워크정책실장	이태희
정책기획관	류광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고서곤
정보통신정책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허성욱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장

홍송	진재	배성
한김	상재	혁영
김동	동성	철호
강민	상경	현중
박김	종도	현성
이원		모